

尹정부 첫 현충일... “비닐 우의차림 참배 아쉬워” 목소리

尹 강력 대북메시지는 긍정 반응
우산없이 참배하는 해외와 비교
일각서 과도한 의전 의식 기인 지적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첫 현충일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렇지만 ‘세계 6위라 자부하는 군사력에 비해, 품격있는 군사문화가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충행사, 국가지도자로 본 품격

지난 6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군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부하들의 명예회복에 노력해 온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대령 전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라는 부분은 대통령 추념사 중 인상깊은 내용이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가는 일은 없



(위에서 시계방향) 지난 6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흰색우의를 입고 헌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2017년 5월 14일 파리 에투알 개선문에 있는 무명용사묘를 향해 비를 맞으며 걷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폭우 속에서도 우산 없이 추모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야 한다”고 추념식 초청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념식 이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

료를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보훈을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이 취임 첫 현충일 기념행

사를 잘 시작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만, 추념식 행사에 대해서는 ‘국격에 걸맞는 품격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내린 비로 인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흰색 비닐 우의를 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비가 내려도 우산 없이 깨끗한 자세로 현충행사에 참석한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국력에 비해 낮은 군사문화와 과도한 의전 의식

군 일각에서는 ‘군과 사회의 낮은 군사문화 인식’과 임석상관에 대한 과도한 ‘의전 의식’이 오랫동안 누적돼 벌어진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급 의전행사를 주로 담당하는 국방부 의장대는 의전에 불편한 신형 K2C1 소총을 사용하고, 각군의 일반적인 예복보다 화려한 의장복을 착용한다. 품격을 자랑하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의장대는 전통 깊은 미국군 일반예복과 2차대전 당시에 사용된 M1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통과 원칙을 호국 영혼들 앞에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국영웅들 앞에서 국가지도자도 조연일 수밖에 없다는 선진국의 군사문화는 수장수여식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의 경우 훈장 수여자인 대통령보다 수훈자를 주변으로 대한다. 주변인 호국영웅의 품격을 높이지 못해 왔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러시아, 대만 심지어 북한도 참전용사가 참전 당시의 제복을 차려입고 현충행사에 초청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가 제정하고 지원하는 제복이 없는 실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전국 134개 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기존 134개 댐 시설의 10년 단위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물환경과 주변지역 보전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총괄한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총 134개 댐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의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댐 관리 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해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총괄해 10년 단위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제출한 댐관리 계획을 환경부의 댐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관할 댐에 대한 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댐 건설을 계획할 때 사전검토 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

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도 계획에 담겨야 한다.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관리비 갑질’ 스타필드하남, 자진 시정키로

공사 중에도 관리비 100% 부과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영업 중 부과되는 관리비를 지불했던 스타필드하남 임접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사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의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스타필드하남과 달리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지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지난 4월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한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으로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임접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범정부 IPEF 대응 체계 마련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해 경제계와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으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대외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한다.

또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대 주요 분야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에 감안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해,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6월 중 출범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자회사 규정 위반’ SKC 제재

손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시정명령, 과징금 3600만원 부과

SK의 자회사인 SKC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

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 ~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